

다산포럼



이기영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호서대 명예교수

최근 단셋 소화기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9세 사이 연령에서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12.9명으로 세계 1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약 30%가 만성질환자이고 편의점 가동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무려 7배에 달한다. 한국의 암 치료율은 미국보다도 높아 각종 암을 치료하려 세계에서 몰려오는 의학 선진국이다.

'김치 된장 청국장 냄새가 나긴 하지만, 시원하고 구수한 맛 우리 몸엔 보약이지요. 치킨 피자 햄버거 기름

부끄러운 '세계 1위' 대장암과 자살률

지고 입에 달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 2000년대 초반 국민 건강을 위해 패스트푸드 퇴출 운동에 앞장섰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 환경정의 등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들 단체들과 함께 패스트푸드 추방 운동을 벌였는데 관련 영화까지 나오면서 매출이 20%나 감소하자 맥도널드가 철수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자료를 검색하다가 88 올림픽 관련 기사를 보니 독일 선수들이 식사 후 마그네슘 태블릿을 먹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까닭을 물었다.

는 구할 수가 없어 대신 마그네슘과 항산화제 태블릿을 먹어야 근육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흰 밀가루나 흰 쌀을 재료로 만든 음식을 주로 먹는 한국인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해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히 저하된다.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0.7 이하 근사율이 80% 전후 수준인데 반해 흰 빵을 멀리하고 검은 통밀빵을 주로 먹은 독일인들은 겨우 10%대이다. 가공식품은 식이섬유나 미네랄 등 영양소가 없고 칼로리뿐인 쌀·밀·가루·설탕 등 하얀 식품 재료와 보존료 등 각종 화학 첨가물들을 과대 가공해 만든 유해 음식이다.

다산 선생은 서양의 의과학인 중독법 등을 담은 마과 회통을 지어서 당시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중독이 완성되어 널리 퍼지기도 전에 신유사육으로 경상도 장기로 귀양을 가는 비운을 맞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청춘 특특



김정연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2학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순간으로 구성돼 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할지 말지 등등 사소한 것부터 내 인생을 좌우할 큰 힘을 가진 것까지 다양한 선택의 바다에서 우리는 헤엄친다.

선택은 다시금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나의 선택으로 온전히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혹은 나와 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 또는 정치 제도를 뜻한다.

다수결의 원칙

주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의사결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만장일치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다수의 횡포'는 알렉시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잘 설명돼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수의 횡포'는 알렉시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잘 설명돼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당연한 진리가 아니고 소수의 견해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결의 원리는 마치 악과 같다. 약은 우리의 삶에 이롭지만 과용하거나 남용하게 될 때는 독으로 돌아온다.

량적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올바른 소수 의견이 배척당하는 경우가 생겨 중우정치(衆愚政治)나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그릇된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우리나라, 특히 정치권을 보면 이런 대화와 타협, 토론이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다.

다수결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늘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기고

맹탕 국정감사, 개선 필요하다



양성관
동강대 교수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는 제헌국회가 개원한 1948년 헌법에 명시되어 1949년 12월에 최초로 실시됐다. 이후 22년간 지속되다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부가 출현하면서 중단된 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1988년부터 재개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감사로서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구성 비율로 인해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권에 대한 심판론의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상처받은 맹탕 국감이 되어 국정감사의 의미 자체가 희석되어 버린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첫째는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 산적한 국내외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합계출산율 0.76명,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온실가스 감소로 인한 대기 순환 체계의 비정상적인 기후변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지속되고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무역 적자 등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둘째는 증인 채택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서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제정이 노출되었다. 피감 기관들은 그 자리만 모면하거나 잘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질문을 피해 가는 모습을 부리기도 했고, 증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국회의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적반하장적 국감장이 되어 버렸다.

셋째는 국정감사 평가단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NGO 모니터단에 각계각층의 지원자를 추가하고 심사 항목과 평가 기준을 더욱 보강하여 신뢰성이 높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증인들의 오만 불손한 태도와 국회의원들의 자세 등으로 역대 최악이었다.

社說

광주시 구태 못 벗은 수의 계약 근절 의지 있다

광주시가 비리 발생 소지가 많고 특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수의 계약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데 상수도본부는 최근 3년간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470건이나 체결했으며, 전체 계약 금액은 60억 2000여 만원에 달했다.

'군중 관리 의무화' 압사 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이태원 헬러원 참사는 과도하게 밀집된 군중에 대한 안전 관리 실패와 부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사고 당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동 일대에는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몰렸다. 특히 해밀톤호텔 옆 폭 4m의 좁은 나리막길에서는 인산인해를 이룬 인파가 날디딜 틈 없이 뒤엉켜 서로 떠밀려 다닐 정도였다.

압사 사고를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군중의 밀도이다. 트레이시 흐레스코 펠 오클라호마대 법대 교수의 2016년 논문 '압사에 대한 성문법적 해결책'에 따르면 군중의 밀도가 1㎡당 다섯 명을 넘어서면 압사 위험이 급증하며, 일곱 명에 이르면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수의 계약을 여전히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 계약은 공적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은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건을 분할해 수의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의 계약은 공적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은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건을 분할해 수의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등鼓

조선의 건국 공신인 삼봉 정도전(1342~1398)은 자신이 편찬한 조선경국전에서 현재의 국무총리급인 재상에 대해 "임금을 보필하지만, 임금이 옳은 일을 하면 적극 따르고, 옳지 않은 일은 끝까지 거부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자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총리로선 의도치 않은 단순한 헤프닝으로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a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QR code.

Table with 4 columns: Position (회장/발행인, 논설실장, 편집총괄국장), Name (金汝松, 程厚植, 崔宰豪), and Contact Info (Phone, Fax, Email).